

## 17대 대선 투표 참여율과 기권

김진하 | 계명대학교

### | 논문요약 |

2007년 치러진 17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참여율은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 논문에서는 17대 대통령 투표 참여율을 분석하고, 이를 과거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율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대통령 투표 참여율의 변화를 거시적으로는 후보자들의 경합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후보자적 요인과 정당귀속감의 측면에서 다루어보고, 개인의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중심으로 투표 참여와 기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하여 보았다.

연령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라는 것은 과거 선거와 이번 17대 대선에서도 입증되었다. 그러나 지역주의, 특히 호남의 지역주의는 과거와는 달리 17대 대선의 투표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정당귀속감이 강할수록 투표율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도 17대에는 부분적으로만 맞았다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일수록 투표율이 높았으나, 열린우리당과 다른 정당의 지지 정도는 투표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유권자, 정동영 후보를 좋아하는 유권자 등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이명박 후보를 좋아하는 유권자,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보수적인 유권자 층이 투표에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였다.

또한, 이번 선거가 일찍이 승자를 쉽게 예측할 수 있을만큼 선거 경합성이 낮았던 점도 낮은 투표율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선거 경합성에서 중요한 것은 10% 이상의 표를 얻고, 차점자와 표를 합산하면 1위 득표자보다 표가 더 많이 나오는 제3후보의 존재이다. 이렇게 강력한 제3후보자가 존재했던 선거는 높은 선거 경합성으로 인해 투표율이 높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투표율이 낮았는데, 17대 대선의 낮은 선거 경합성도 전체적으로 낮은 투표율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주제어** | 투표율, 기권, 정당귀속감, 선거 경합성, 대통령 선거, 지역주의, 세대, 이념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은 대의 기능을 담당할 공직자를 국민이 선거로 선출하는 것에 있다.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정부의 정통성을 부여하고 리더십을 충원하는 중요한 기재이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국민의 낮은 관심과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투표율이 점차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를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보는 시각이 많이 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율도 민주화 이래로 계속 낮아지고 있고, 2007년 치러진 17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참여율은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 논문에서는 17대 대통령 투표 참여율을 분석하고, 이를 과거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율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대통령 투표 참여율의 변화를 거시적으로는 후보자들의 경합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후보자적 요인과 정당 귀속감의 측면에서 다루어보고, 개인의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중심으로 투표 참여와 기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하여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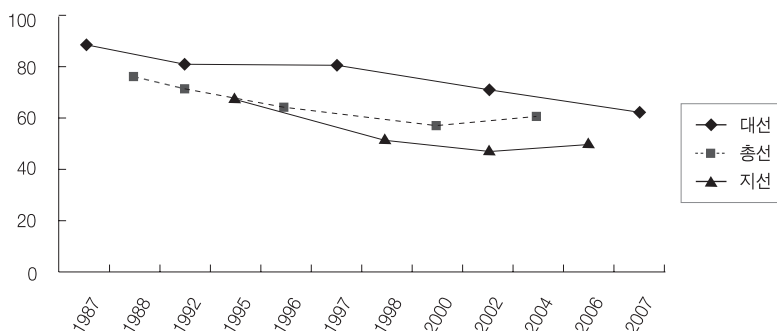
특히,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기권 요인을 분석하고, 그간 발표되었던 한국 선거에서의 기권 요인들이 17대 대선에서도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검증하였다. 연구를 위해 사용된 자료는 한국 리서치가 2007년 12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전화 조사한 자료로, 전국 남녀 19세 이상의 1,201명이 조사되었고, 표집 오차는 신뢰구간 95%에서 2.8%이다.

## I. 서론

17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63%로 민주화 이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 중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물론, 낮은 투표율은 17대 대통령 선거가 반(反)노무현 정서와 범여권 후보의 지리멸렬, 경제 이슈의 선점으로 인해 이명박 후보의 순위승리가 예측되었던 점도 작용을 했지만, 민주화 이후 한국 선거의 흐름이기도 하다.

다음의 <그림 1>과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화 이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계속해서 낮아졌다. 그러다가 예외적

〈그림 1〉 선거 참여율 변화 추이



〈표 1〉 민주화 이래 투표율 변화 추이

(단위: %)

	1987	1988	1992	1995	1996	1997	1998	2000	2002	2004	2006	2007
대선	89.2		81.9			80.7			70.8			63
총선		75.8	71.9		63.9			57.2		60.6		
지선				68.4			52.7		48.9		51.2	

으로 2004년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이 60.6%로 3.4% 올라갔고, 2006년 지방선거 투표율도 2002년의 48.9%에서 51.3%로 2.4% 올라갔다. 2004년과 2006년 치러진 최근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그 직전에 치러진 선거에 비해 다소 올랐다는 점에서 2007년 대선도 같은 반등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계속 하락을 보일 것인지가 관심이었는데, 17대 대선의 투표율이 16대 대선의 70.8%보다 7.8% 하락하여,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와 다른 패턴을 보이게 된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총선과 지선이 투표율 하락추세를 확연하게 벗어나는 반면에 대선 투표율의 하락이 계속되는 것인가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총선과 지선 투표율의 반등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대선 투표율의 추세가 다른 두 선거의 투표율의 추세와 차별을 보이게 되는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위의 〈표 1〉을 보면, 총선과 지선에 비해 대선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나고 있다. 하지만, 또한 투표율 하락의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대선 투표율의 낙폭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1987년 대선 투표 참여율은 89.2%였는데, 2007년 대선의 경우는 63%로, 투표율이 25.8% 정도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금년 총선의 투표율이 어느 정도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1988년 총선의 투표율 75.8%를 2004년의 투표율 60.6%와 비교하여 보면 약 15.2% 하락하였고, 2005년 지선도 최초 실시해인 1995년과 비교해 보면 17.2%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은 것에 비해, 대선 투표율의 하락은 더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민주화 이후 직선제로 치러진 최초의 대선인 1987년 선거에 국민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져 비정상적으로 투표율이 높았고, 이를 최근의 투표율과 비교하니 상대적으로 낙폭이 크게 느껴지는 점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선과 총선이 같은 해에 치러졌던 1992년과 대선과 지선이 같이 치러졌던 2002년, 대선의 투표율은 총선에 비해 10%, 지선에 비해 21.9% 높았지만, 2007년 대선 투표율은 2004년의 총선 투표율 60.6%에 비해서는 단 2.4%, 2006년의 지선 투표율 51.2%에 비해서는 11.8%밖에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2007년 대선 투표율이 총선이나 지선에 비해 더 급격하게 낮아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2007년 대선 투표율은 왜 낮아졌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투표율 하락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점으로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무투표 법규가 없는 OECD 민주국가의 투표율은 1980년대 이후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Wattenberg 2002). 우리나라도 투표를 강제하는 법규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OECD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낮아지는 투표율은 보편적인 세계적 추세를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투표율이 더욱 낮은 미국의 경우는 낮은 투표율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인의 행태와 태도에 초점을 둔 미시적 분석이 많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설명은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인데, 투표 참여를 비용과 이익의 효용의 문제로 접근하여 설명한다(Riker and Ordeshook 1968). 실제로 미국의 경우 선거 불참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너무 바빠서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1980년 7.6%에서 1996년 21.5%로 증가하였다(Watternberg 2002). 이를 보면 현대인의 바쁜 생활로 인해 투표 참여는 일종의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고 이는 투표 비용의 증가로 이어져서 투표율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두

〈표 2〉 와텐버그(Wattenberg)의 표준화된 투표율 지표<sup>1)</sup>

	1960년	1998년
강한 정당 귀속감	+8	+39
약한 정당 귀속감	+2	-11
무당파에 가까운 귀속감	-1	-17
무당파	-28	-32

번째 설명은 정당 귀속감이론(Party identification theory)이다. 과거에 비해서 정당 귀속감이 강한 유권자들과 정당 귀속감이 약한 유권자들 사이의 투표율의 차이가 증대되었다고 하는 이론이다. 〈표 2〉는 와텐버그(Wattenberg)의 표준화된 투표 참여율(standardized turnout) 비교 분석의 일부이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1960년 선거에서 무당파를 제외하고 정당 귀속감이 강한 유권자들이나 약한 유권자 혹은 무당파에 가까운 귀속감을 가진 유권자들의 투표율 차이는 크지 않았었다. 그러나 1998년에 오면 강한 정당 귀속감을 가진 유권자들과 약한 정당 귀속감을 가진 유권자들 사이의 투표율에 있어 큰 차이를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점차 정당 귀속감을 가지지 않는 유권자가 늘어나고, 강한 정당 귀속감을 가진 유권자의 수가 줄어드는 현상(Wattenberg 1992)이 겹쳐져서 투표율의 하락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설명은 인구통계학적 설명이다. 특히 교육 수준과 투표율과의 높은 상관관계는 와텐버그의 표준화 계수에 의한 과거 투표율과의 비교를 통해 또 한 번 입증되었다. 그러나 미시적 차원에서의 분석 결과는 거시적 차원에서 대학 교육의 대중화로 인해 대졸자가 더 많이 양산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왜 투표율이 올라가지 않고, 낮아지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교육수준과 투표참여율의 역설의 문제에 빠지게 된다. 아울러서 젊은 세대의 낮은 투표율로 인한 세대간 투표 참여율 격차의 증가도 낮은 투표율 증가의 원인으로 본다(Wattenberg 2002).

1) Wattenberg에 따르면 이 지표는 당해 연도의 평균 투표율에서 특정 집단의 평균 투표율을 비교하여 표준화한 지표다. +쪽으로 숫자가 커질수록 평균보다 높은 투표율을 의미하며, -쪽으로 숫자가 커질수록 평균보다 낮은 투표율을 의미하게 된다(Wattenberg 2002, 65 참조).

미국을 사례로 한 연구 결과를 한국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첫째, 한국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선거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어서, 선거 참여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이 미국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다. 둘째, 잦은 정당체제의 변화와 정당의 이합집산이 안정적인 정당귀속감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당귀속감을 가질 기회 자체가 별로 없었다. 또한, 교육 수준의 증가와 투표율 감소의 역설적 관계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그런 점에서 미국에서의 투표참여 분석을 한국적 상황에 도입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의 선거 불참 요인에 대한 분석은 여러 가지로 시도되었다. 합리적 선택 이론의 관점에서 김옥은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에서 연령 외에는 기대효용에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김옥 1999; 2005). 김옥에 의하면 선거일이 공휴일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젊은이들의 투표 참여에 의한 기회비용은 높아진다고 주장을 하였다(김옥 1999). 지역주의 역시 합리적 선택 이론에 의해 설명이 가능한데, 지역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지역의 패권정당이나 후보에게 투표를 하면 반사 이익이 많을 것으로 기대하여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김옥 2002). 그 밖에 선거구의 특성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황아란 1997). 황아란의 연구는 공동체 이론, 합리적 선택 이론, 후보자적 요인, 지역주의 등으로 투표율을 설명하고 있는데, 선거구의 인구가 많을수록, 선거경쟁이 치열할수록, 재선 출마자가 존재할 경우, 지역주의적 성격이 강한 지역일수록, 선거 참여율이 올라간다고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지역주의적 투표형태를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설명하여 근절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일반론과 달리 지역주의를 합리적 선택이론의 입장에서 지역의 기대이익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투표율과 관련된 연구 결과의 특이점이다.

본 연구 논문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변수들을 17대 대선에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집합 자료를 통해 일반화가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여, 선행연구들이 간과했던 참여율 변화와 개인의 참여율 변화 요인을 미시적 분석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한국 선거에서 나타나는 참여와 불

참의 동인과 민주주의에 던지는 함의를 찾고자 한다.

## II. 본론

### 1. 집합자료 분석을 통한 투표 참여율 연구

#### 1) 선거구 경쟁과 투표율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기회비용을 포함한 투표참여에 따르는 비용(C)과 투표 결과가 가져올 이익(B), 공적 의무감(D), 그리고 투표참여가 결과를 바꿀 가능성(P) 등이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P(B-C+D) > 0$  일 때, 유권자들은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여기서 투표참여가 결과를 바꿀 가능성 P는 후보 경합성에 달려 있다. 선거의 경합성이 높을수록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선거 경합성을 두 가지로 측정하였다. 하나는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의 득표율의 차이이다. 1, 2위 후보자 간의 득표율의 차이가 많이 난다면 비교적 경합이 약했다고 볼 수 있고, 득표율의 차이가 적게 나타난다면 비교적 경합이 강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제3후보의 존재이다. 득표율이 10% 미만인 후보들은 의미 있는 제3후보라고 볼 수 없으나, 그 이상의 득표를 올렸을 경우 이를 의미 있는 제3후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위 후보자가 압승을 거두어서, 2, 3위 후보자의 표를 합산하여도 1위 후보자의 득표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 제3후보의 존재가 크게 경합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기에, 제3후보의 존재는 3위 후보자가 10% 이상의 득표를 올리고, 2위 후보자와 표를 합산하여 1위 후보자보다 많은 경우만을 분석상의 목적을 위해 제3후보 존재라고 규정하였다. 검증하고자 하는 것은 선거 경합성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높다고 하는 가설이다.

17대 대선의 선거 경합성과 투표율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집합자료를 사용하였다. 대선은 황아란과 김욱의 연구에 사용되었던 총선이나 지선과는 달리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갖기 때문에 17대 대선의 경쟁 정도는 횡적인 분석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과거의 대통령 선거의 경쟁 정도와 비교할 수밖에 없

〈표 3〉 역대 대선 투표율과 대선 경쟁도 관계<sup>2)</sup>

(단위: %)

	1987	1992	1997	2002	2007
득표율 차이	7.43	8.03	1.5	2.3	22.6
투표율	89.2	81.9	80.7	70.8	60.3
제3후보 출마	김대중·김종필	정주영	이인제	없음	없음

다. 〈표 3〉은 1987년 민주화 이래로 치러진 대선의 득표율 차이와 투표율, 그리고 의미 있는 제3후보의 출마 여부를 보여준다.

〈표 3〉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한 득표율 차이로만은 투표율 하락을 설명할 수 없고 제3후보의 존재가 투표율 차이에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87년과 1992년의 경우 1997년과 2002년에 비해 득표율 차이가 크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더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3후보가 똑같이 존재하지 않았던 2002년과 2007년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2002년은 득표율 차이가 2.3%였었던 데 비해서 2007년에는 22.6%로, 득표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강력한 제3후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득표율 차이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당선자와 차점자 간의 득표율 차이로는 모든 투표율 변화를 설명할 수 없지만, 제3후보의 존재 조건이 같다면 득표율 차이는 투표율의 차이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단순한 득표율 차이보다는, 독자적으로 10% 이상의 득표율을 가지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후보의 존재는 투표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1987년부터 1997년까지는 김대중, 정주영, 이인제라고 하는 강력한 제3

2) 경쟁력 있는 제3후보자 요인의 기준은 10% 이상 득표율과 차점자와 득표를 합쳤을 때, 당선자보다 많은 경우를 기준으로 했다. 16대 대선의 경우 권영길 후보의 3.86%를 이회창 후보의 46.17%에 합치면 50%가 넘게 되지만, 권영길 후보의 득표율 자체가 10%가 되지 못하여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보지 않았다. 17대 대선의 경우 이회창 후보의 득표율이 15.1%에 달하여, 10% 이상 득표율을 보였지만, 차점자인 정동영 후보의 득표율과 합쳐도 41.2%로 이명박 후보의 득표율 48.7%에 미달하여 경쟁력 있는 제3후보로 분류하지 않았다. 이는 이회창 후보가 경쟁력 있는 후보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선거 경합성을 측정하는 면에서는 경합적인 선거가 될 정도로 의미 있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의 후보가 존재하였다. 이들의 존재는 선거 경합성에 영향을 미쳐서 투표율을 올리게 하는 요소로써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투표율이 제일 높았던 13대 대선의 경우 제3후보였던 김대중 후보의 득표율은 26.5%였고, 14대 대선에서 정주영 후보의 득표율은 16.1% 였다. 또한, 1997년 15대 대선에서 이인제 후보는 18.91%의 득표율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제3후보가 높은 득표율을 보인 대선에서 투표율은 80% 이상을 기록하였다.

거시적 지표만으로는 통계적 실증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나, BP-C+D)0 이라는 합리적 선택이론에서의 선거 경쟁 부분인 P가 의미 있는 영향을 행사할 개연성을 <표 3>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sup>3)</sup> 17대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는 투표율을 끌어올릴 만큼의 경합적인 변수는 아니었고, 차점자인 정동영 후보의 약세로 말미암아 이명박 후보의 압승이 쉽게 예측되었다는 점에서, 17대 대선의 낮은 선거 경합성이 낮은 투표율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17대 대선의 투표율 하락에는 선두 후보의 손쉬운 승리 예상되었던 점, 즉 낮은 경합성에 일정부분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지역주의 영향

1987년 민주화 이래로 대선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역주의가 나타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더 이상 지역주의는 변수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경험적인 자료는 아직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동안의 지역주의 논쟁은 대부분 지지정당에 관한 것으로, 지역주의와 관련된 투표율에 관한 논의는 앞서 언급한 연구 외에는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지역주의가 지지정당이나 지지후보 혹은 혐오정당이나 혐오후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서라는 점에서, 지역주의 지역의 투표율은 중립지역의 투표율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의가 강한 지역의 투표율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의 수립이 가능하다.

다음의 <표 4>는 지역주의 영향권 지역과 지역주의 중립 지역 간의 투표율

3) B는 선거효용, C는 선거 비용, P는 자신의 투표가 선거결과를 바꿀 가능성, 즉 경쟁 정도, D는 공적 의무감으로 경쟁 정도 P에 영향을 미친다.

〈표 4〉 지역주의 강세 지역과 중립 지역의 투표율 변화 추이<sup>4)</sup>

(단위: %)

	1987	1992	1997	2002	2007
중립 지역	90.43	82.78	80.29	70.06	61.73
충청	91.93	82.61	78.13	67.07	60.93
영남	92.8	84.38	79.43	71.45	65.02
호남	94.3	89.33	87.24	76.15	65.37

차이를 보여준다. 지역주의 지역은 영남과 호남, 충청으로 상정하고, 지역주의 중립 지역에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등을 포함시켰다.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광역시는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지역주의 영향권 지역으로 편입시켜 13대 대선부터 17대 대선까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13대 대선은 영남의 노태우, 김영삼, 호남의 김대중, 충청의 김종필 후보가 출마하여, 한국 선거에서 지역주의의 시발점이 된 선거이다. 전국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서 지역별 편차가 크지 않으나, 투표율이 지역주의 강세 지역인 호남, 영남, 충청 순으로 투표율이 높게 나오고, 이들 지역의 투표율이 중립 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삼당합당으로 충청지역의 김종필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14대 대선에서는 영남의 투표율은 84.38%로, 82%대의 중립 지역이나 충청권에 비해 약간 더 높았고, 호남은 영남에 비해서도 5% 가량 높은 89.33%였다. 이러한 차이가 얼마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호남 지역의 투표율이 중립 지역에 비해서는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분명하다. 15대, 16대 대선에서도 호남 지역의 투표율은 다른 지역의 투표율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지역주의 강세지역인 영남이나 충청의 투표율은 중립 지역과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13대부터 16대 대선까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호남지역의 투표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투표율의 지역적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7대 대선에서는 호남뿐만 아니라 영남의 투표율도 타 지역에 비해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별 투표율 자료에서 표를 제작하였고, 투표자수에는 기권, 무효표까지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4% 이상 높게 나온 것을 보면, 17대 대선에서는 영남과 호남 지역의 지역주의 성향이 투표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영남까지 포함하여 보았을 때, 2007년 대선은 유일하게 영남, 호남의 투표율이 타 지역과 차별적으로 높은 선거였다.

### 3) 인구통계학적 변수

다음의 <표 5>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본 17대 대선 투표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조사 결과이다.

17대 대선의 투표 참여율이 63%에 불과한 데 비해서,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자료의 응답자의 투표 참여율은 89.5%로, 상당히 투표율이 과장되어 보고된 것

<표 5> 17대 대선 투표 참여/기권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Base=전체	사례수 (명)	투표했다	투표하지 않았다	계
		%	%	%
전 체	(1,201)	89.5	10.5	100.0
연령				
19-29 세	(256)	76.7	23.3	100.0
30대	(278)	89.0	11.0	100.0
40대	(272)	93.2	6.8	100.0
50대	(181)	97.1	2.9	100.0
60대 이상	(213)	94.2	5.8	100.0
학력				
중졸 이하	(180)	94.9	5.1	100.0
고졸 이하	(324)	91.9	8.1	100.0
전문대재학 이상	(689)	86.8	13.2	100.0
모름/무응답	(7)	100.0	.0	100.0
고향				
서울	(198)	81.7	18.3	100.0
인천/경기	(133)	90.9	9.1	100.0
대전/충청	(187)	89.6	10.4	100.0
광주/전라	(204)	86.2	13.8	100.0
대구/경북	(192)	94.9	5.1	100.0
부산/울산/경남	(206)	92.6	7.4	100.0
그외 지역	(80)	93.3	6.7	100.0

을 알 수 있다. 투표율의 과다 보고는 선거관련 조사에서 종종 나타나는 문제로, 투표율의 객관적 분석을 위해 사용할 때는 주의가 요망되는 부분이다. 응답자들을 인구통계학적 변수 집단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특정 집단에서 집중적으로 그 왜곡이 나타나지 않고,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투표 참여의 과장보고가 되었을 경우에는 투표율 비교분석에 문제가 크게 되지 않을 수 있다.

연령을 보면 10대에서 50대로 올라가면서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모두 오차 범위 밖에 있어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력수준이 올라갈수록 투표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고향별로 투표율을 보면, 서울, 광주 순으로 투표율이 낮게 나오고, 기타 지역은 오차범위 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본 17대 대선 투표 참여율은 학력수준이 높고, 연령이 낮으며, 서울, 광주가 고향인 경우 투표율이 낮다고 볼 수 있지만, 단순한 빈도수 조사만으로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에도 여전히 영향이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개인 수준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사용했을 때의 효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 2. 개인 수준 자료를 이용한 분석

### 1) 인구통계학적 분석

다음의 <표 6>은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상호 통제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투표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표이다.

위의 로지스틱 회귀식에서 사용된 변수는 전부 가변수다.<sup>5)</sup> 지역의 경우 중립 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가 기본 지역이고, 연령은 40,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기본 집단이다. 소득수준의 경우 연도별로 다르게 측정되어서 통

5) 독립변수를 전부 가변수로 사용했을때, 로지스틱 회귀식은 로그리니어(loglinear) 식이 되어 버린다. 그러나 연령의 경우 세대별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단순히 연령 증감에 따른 투표율 변화를 측정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다른 변수들도 선형적 관계를 가질 수도 있지만, 비선형적 관계에 있을 수 있기에 가변수를 사용하였다.

〈표 6〉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투표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 -  $\text{Exp}(\beta)$ (유의확률)<sup>6)</sup>

		14대	15대	16대	17대
지역주의	충남	.969(.938)	1,254(.544)	.625(.06)	0.605(.088)
	영남	.896(.675)	<b>8,224(.004)**</b>	1,193(.373)	1.586(.081)
	호남	3,341(.048)*	1,891(.021)*	2,402(.016)*	0.605(.089)
연령	20대	<b>.313(.007)**</b>	<b>.197(.000)**</b>	<b>.470(.002)**</b>	<b>0.249(.000)**</b>
	30대	.511(.122)	.384(.031)*	.778(.309)	0.605(.1000)
	50대	.537(.210)	1,147(.819)	2,086(.044)*	2,667(.05)*
	60대 이상	.418(.083)	.524(.318)	1,585(.177)	2,566(.077)
교육	중졸	.912(.781)	1,909(.190)	.82(.495)	0.835(.723)
	전문대졸 이상	1,314(.374)	1,239(.379)	1,248(.237)	1,048(.856)
소득 <sup>7)</sup>	100만 원 미만	.701(.742)	2,207(.334)	.867(.723)	0.685(.41)
	200만 원 미만	.442(.430)	.527(.116)	.646(.116)	0.811(.511)
	300만 원 미만	.238(.171)	.85(.691)	.792(.431)	0.984(.963)
	500만 원 미만	1,289(.860)	.853(.720)	.494(.045)*	0.978(.948)
	500만 원 이상				0.882(.664)

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우나 17대 대선에 맞춰서 소득구분을 하였고, 2007년 대선을 기준으로 300만 원대 월수입이 기본 집단으로 사용되었다. 〈표 6〉에서 계수는 승산비(odds ratio)로 1보다 큰 값을 가지면 기본집단보다 투표할 확률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 기본집단보다 투표할 확률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17대 대선에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값을 가지는 변수는 연령변수 중 20대 변수밖에 없다. 20대 변수는 14대 대선부터 17대 대선까지 지

6) 이탤릭체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말하고, **볼드체**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의미한다. 14대 선거자료는 한국선거연구회 자료를 이용하였고, 15, 16대 선거자료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자료를 이용하였다. 계수는  $\text{Exp}(\beta)$  값이고, 괄호안의 숫자는 유의확률이다.

7) 14대, 15대, 16대 소득 구분은 17대와 맞지 않는데, 그것은 설문이 17대와 달라서 정확하게 소득구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16대의 경우 100만 원 미만 대신 90만 원 미만이 첫 번째 집단이고, 마지막 집단은 400만 원 이상이다. 15대의 경우 첫 번째 소득 집단은 70만 원 미만, 두 번째 집단은 150만 원 미만, 세 번째는 220만 원 미만, 기본 집단은 250만 원 미만, 마지막 집단은 250만 원 이상이다. 14대의 경우 첫 번째 소득 집단은 60만 원 미만, 두 번째는 130만 원 미만, 세 번째는 190만 원 미만, 기본집단은 220만 원 미만, 마지막은 220만 원 이상이다.

속적으로 투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유일한 인구통계학적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역대 대선에서 20대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40대에 비해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0.2~0.3배에 불과하다. 예외가 있다면, 16대 대선에서 20대의 투표율은 40대 투표율의 0.47배로 전에 비해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월드컵과 효선이, 미선이 장갑차 사건, 촛불시위 등으로 20대의 자발적 참여 혹은 동원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sup>8)</sup> 16, 17대 대선에서 50대는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40대에 비해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각각 2배, 2.6배 정도 높았고, 이는 95%의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결과이다. 이는 최근 들어, 20대 외에 다른 연령의 변수도 투표 참여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40대를 기점으로 40대 이하는 40대에 비해 낮은 투표 참여의 경향이 있고, 50대는 높은 투표 참여의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표 4>에서 17대 대선의 투표율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고 하였으나, 다른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지역은 유의수준 0.05나 0.01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최소한 17대 대선의 참여율에는 지역주의 요소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4, 15, 16대 대선에서는 분명히 지역주의가 투표율에 영향을 미쳤었다는 것을 <표 6>은 보여주고 있다. 특히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가 출마한 15대 대선이 경우 다른 조건이 같다면, 영남 유권자들은 중립지역 유권자들에 비해 투표할 확률이 8.2배 높았고, 호남 유권자들은 중립지역 유권자들에 비해 1.89배 투표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유의수준 0.01과 0.05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로, 영, 호남 유권자들이 중립 지역 유권자들에 비해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남 유권자들이 14대나 16대 대선에서는 중립지역 유권자들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투표율의 차이를 보이지 못한 데 비해, 호남 유권자들은 95% 신뢰구간에서 중립지역 유권자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투표율의 차이를 보여 주었

8) 김옥은 그의 논문에서 20대는 자발적 참여뿐만 아니라 동원에 의한 투표 참여의 영향도 받는다는 것을 밝혀낸 바 있다(김옥 2004).

다. 중립지역 유권자들의 투표 가능성에 비해 호남지역 유권자들은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16대 대선에서는 2.4배, 14대 대선에서는 3.3배의 높은 투표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투표율에 미치는 지역주의의 영향, 특히 호남의 영향이 17대 대선에서 사라진 것을 지역주의의 약화로 이해해야 할지 아니면 17대 선거의 특징적 변수에 의한 일회성 사건으로 봐야 할지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으나, 17대 대선에서 모든 조건이 같다면 거주 지역은 투표 참여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17대 대선에서 지역이 투표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중립지역의 투표율이 지역주의 강세 지역의 투표율만큼 올라서라기보다는, 지역주의 강세 지역의 투표율이 중립지역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봐야 하고,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강한 호감을 이끌어내는 후보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호남 유권자들에게 강한 비호감을 유발하는 후보가 과거 선거에 비해 없었다는 점이 투표율과 관련된 지역주의 변수의 약화의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이 투표 참여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미국의 많은 연구보고들과는 달리 한국의 대통령 선거의 경우 교육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소득 수준도 전반적으로 투표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직 예외가 있다면, 16대 대선에서 가계별 월수입 400만 원 이상의 유권자의 경우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가계별 월수입 300만 원대의 유권자에 비해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0.49배 낮게 나온 점을 들 수 있다.

## 2) 정당 귀속감

한국의 정당계도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이합집산과 간판 바뀌달기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정당귀속감이 형성될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정치지도자들이 이리저리 간판을 바꿔달고 이합집산을 해도 그들을 따라 지지정당을 자연스럽게 바꾸는 유권자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특히 지역주의 구도 하에서 정당의 이름은 달라져도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지도자와 구성원에 대한 충성심은 한국식 정당귀속감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정당귀속감으로 정의하여, 대통령 선거에서의

〈표 7〉 17대 대선 투표율에 미치는 정당 귀속감의 영향<sup>9)</sup>

17대 대선	M1(투표율)	M2(투표율)	M3(투표율)	M4(선거 관심)
열린우리당	.947(.27)	.968(.563)		.024(.043)*
한나라당	<b>1.184(0.000)**</b>	1.09(.049)*		<b>-.088(.000)**</b>
민주노동당	.949(.343)	.985(.795)		<b>.035(.008)**</b>
민주당	1.03(.687)	1.012(.88)		-0(.997)
국민중심당	.924(.258)	.944(.463)		.021(.204)
창조한국당	1.05(.384)	.966(.565)		<b>-.056(.000)**</b>
선거 관심도		<b>.313(.000)**</b>	<b>.310(.000)**</b>	

정당귀속감이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것이 다음의 〈표 7〉이다.

〈표 7〉의 첫 번째 모형 M1은 정당 귀속감이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본 것인데, 다른 정당 귀속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고, 오직 한나라당 정당귀속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 지지가 1 올라갈수록 투표할 가능성이 1.184배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요소는 선거에 대한 관심일 것이다.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을수록 투표참여 가능성이 낮아진다. 세 번째 모형 M3는 투표 참여를 종속변수로 놓고 선거 관심을 독립변수로 놓고 분석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선거에 대한 관심이 1 감소할수록 투표할 가능성이 0.4배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거에 대한 관심이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낮은 투표율은 낮은 관심이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모델 M2는 선거 관심 변수를 통제했을 때에도 정당 귀속감, 특히 한나라당 귀속감이 투표 참여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기 위한 것으로, 결과는 선거에 대한 관심을 통제해도 한나라당 지지가 1 올라갈수록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1.09배 증가한다는 것을 알았다. 마찬가지로 정당 귀속감으로 통제해도 선거 관심이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감소

9) M1, M2, M3는 투표와 기권을 종속변수로 하고, M4는 선거 관심을 종속변수로 갖는다. 정당의 이름은 11점 척도(0-10)의 정당 선호도인데, 숫자가 커질수록 정당을 좋아하는 것을 뜻한다. 선거 관심도는 4점 척도로 숫자가 높을수록 관심이 없는 것을 뜻한다. 이탤릭체는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볼드체**는 99%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뜻한다. M1-M3의 계수는  $\text{Exp}(\beta)$  값이고, M4의 경우는 b값이다.



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M4는 선거 관심도에 정당 귀속감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기 위한 OLS 회귀분석 결과이다. 직접적으로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다른 정당 변수들도 선거 관심도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나라당과 창조한국당을 선호할수록 선거에 대한 관심은 증대하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을 지지할수록 선거에 대한 관심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한나라당과 창조한국당 지지자들과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번 17대 대선을 바라보는 관심의 차이를 알아낼 수 있다. 또한 한나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 귀속감은 직접적으로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거에 대한 관심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종합하여 말하면, 정당 귀속감은 17대 선거에서 선거 관심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한나라당과 창조한국당을 지지할수록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을 지지할수록 선거에 관한 관심이 낮았다. 17대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는데, 결국 정당 귀속감은 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경로로 하여 간접적으로 투표율에 영향을 미쳤고, 한나라당 귀속감은 또한 직접적으로 투표율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정당 귀속감은 직, 간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이명박 후보의 압승은 민노당과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 약화를 통한 기권이 많았던 점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17대 대선의 결과를 통시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16대 대선 투표참여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다음의 <표 8>은 16대 대선 투표 참여율에 미치는 정당 요인 분석이다.

16대 대선 자료는 17대와 달리 선호도를 11점 척도로 측정하지 않고, 좋아하는 정당과 싫어하는 정당의 존재를 물어보았기에, 선호의 강도는 알 수 없고, 선호 정당과 혐오 정당의 존재만을 알 수 있었다. <표 8>에서 혐오정당의 존재는 16대 대선의 투표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나,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선호도는 투표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한나라당을 선호하는 응답자들은 선호정당이 없는 응답

〈표 8〉 16대 대선 투표 참여율에 미치는 정당 요인 분석<sup>10)</sup>

16대 대선	M1(투표율)	M2(투표율)
한나라당 선호	<b>.3,169(.000)**</b>	<b>3,096(.000)**</b>
민주당 선호	<b>2,412(.000)**</b>	<b>1,926(.000)**</b>
자민련 선호	1,188(.825)	.874(.866)
국민21 선호	.555(.202)	.539(.198)
민노당 선호	2,279(.050)*	2,085(.089)
기타정당 선호	.921(.918)	.713(.684)
열린우리당 협오	1,028(.903)	.853(.500)
한나라당 협오	1,248(.503)	1,194(.605)
민주노동당 협오	.982(.946)	.714(.230)
민주당 협오	1,153(.772)	.906(.846)
국민중심당 협오	1,040(.959)	.677(.616)
창조한국당 협오	1,322(.715)	1,353(.702)
선거 관심도		<b>.402(.000)**</b>

자들에 비해 3.1배 정도 16대 대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 선호자들은 2.4배, 민노당 선호자들은 2.2배 정도 선호정당이 없는 응답자들에 비해 투표 참여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16대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선거 관심도는 대선투표 참여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M2는 선거 관심도를 통제하고 본 정당 요인이 투표 참여율에 미친 영향 분석이다. 표에서 보면 민노당 선호는 선거 관심도를 통제하였을 때, 투표 참여에 통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으나, 한나라당 선호와 민주당 선호자들의 경우에는 선호정당이 없는 응답자들에 비해 여전히 투표 참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협오정당의 존재가 징벌투표의 동인부여로 인해 투표율을 고양시킨다는 논의는 최소한 16대 대선에서는 증명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표 7〉과 〈표 8〉을 비교하면, 16대 대선에서 민주당 선호도는 투표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17대 대선에서는 열린우리당 선호도나 민주당 선호도

10) 계수는  $\text{Exp}(\beta)$ 고, 이탤릭체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이고, **볼드체**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이다. 비교집단은 선호정당 없음과 협오 정당 없음이다.

가 투표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17대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실망과 낮은 지지도, 그리고 유력 후보의 부재로 인한 선거 관심도 하락과 참여 동기의 약화가 범여권 지지자들의 참여를 자극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정권탈환을 원하는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16대와 마찬가지로 17대에서도 투표 참여에 적극적이었다.

### 3) 후보자 요인

와텐버그는 정당중심의 선거운동이 이뤄지지 않고 후보자 중심으로 선거운동의 중심축이 바뀌는 것을 투표율이 낮아지는 이유로 들었다. 실제적으로 후보자 중심 선거운동이 낮은 투표율과 관련이 있는지는 이 논문의 관심이 아니지만, 와텐버그가 현대 선거에서 후보자의 중요성을 시사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후보자 중심의 선거전 아래서는 지지하는 후보자가 있거나 혐오하는 후보자가 있는 유권자들은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에 비해 투표할 확률이 높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특히 이번 17대 대선에서는 문국현 후보의 등장으로 선거에 관심이 없는 젊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의 <표 9>는 후보자 요인이 17대 대선에서 투표 참여에 미친 영향 분석 결과이다.

<표 9>를 보면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이회창, 문국현 후보를 좋아할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지지만, 정동영, 권영길 후보를 지지할수록 투표 참여

<표 9> 17대 대선 투표 참여율에 미친 후보자 요인<sup>11)</sup>

17대 대선	Exp( $\beta$ )	유의확률
정동영 선호도	.968	.437
이명박 선호도	<b>1.143**</b>	.000
이회창 선호도	1.037	.383
문국현 선호도	1.061	.234
권영길 선호도	.901*	.046

11) 후보자 선호도는 11점 스케일로 매우 싫어하면 0, 매우 좋아하면 10이다. 이탤릭체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중요한 결과이고, **볼드체**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이다. Exp( $\beta$ ) 값이 1보다 크면 참여확률 증대이고, 1보다 작으면 참여확률 감소라고 보면 된다.

확률이 낮아지고, 반대로 싫어할수록 투표 참여 확률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범여권 혹은 진보후보에 대한 지지가 17대 대선에서는 투표율 견인의 요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히려 진보후보를 싫어할수록 반동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올라갔을 개연성을 보여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는 이명박 선호도와 권영길 선호도 밖에 없다.

즉, 이명박 후보를 좋아할수록 17대 대선에 투표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권영길 후보를 싫어할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또한 높아진다는 점은 통계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결과이다. 17대 대선은 이명박 후보의 독주로 시작해서 독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후보를 좋아하는 유권자일수록 투표 참여의 동기요인이 있었지만,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에는 승산이 없는 선거전이거나 혹은 실망 등이 겹쳐서 투표 참여 동인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출마 후보 중에서 가장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는 권영길 후보의 경우는 그에 대한 지지는 투표율의 증가를 가져오지 못했지만, 그에 대한 반대는 투표 참여의 증대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심을 모았던 문국현 후보의

〈표 10〉 17대 대선 투표 참여율에 미친 정당과 후보자 요인 분석<sup>12)</sup>

	Exp( $\beta$ )	유의확률
정동영 호감도	1.039	.491
이명박 호감도	1.082	.079
이회창 호감도	1.032	.500
문국현 호감도	1.053	.375
권영길 호감도	.925	.215
열린우리당 선호도	.931	.245
한나라당 선호도	1.115*	.041
민주노동당	.988	.849
민주당	1.021	.776
국민중심당	.925	.277
창조한국당	1.036	.574

12) 이탤릭체는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뜻한다.

경우 후보에 대한 선호가 투표 참여의 증대를 가져왔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17대 대선에서는 이명박 후보에 대한 선호도는 투표참여 가능성과 비례하고, 권영길 후보에 대한 선호도는 투표참여 가능성과 반비례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후보자적 요인과 정당 요인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투표율에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정당으로는 한나라당 지지자, 후보로는 이명박 선호가 높을수록 17대 대선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인데, 정당과 후보자를 통제하여 각각의 효과를 보면 어떤 요소가 투표율에 영향을 크게 미쳤는지 알 수 있다. 앞의 <표 10>은 정당과 후보자 요인이 투표율에 미친 영향을 동시에 분석한 결과이다.

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당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는 유의수준 95%나 9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후보자 요인에서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명박 호감도가 9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이 유일하였다. 그러나 후보자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한나라당 선호도는 투표 참여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조건이 같다면 한나라당에 대한 호감도의 상승은 17대 대선 투표 참여의 가능성을 향상 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명박 후보자 요인보다는 한나라당이라는 정당요인이 17대 대선의 투표 참여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 4) 이념 요인과 대통령 평가 요인

이번 17대 대선은 실용주의 중도노선을 표방한 이명박 후보의 승리였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보수층의 반격, 혹은 진보의 후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17대 대선에서 이념 요인(진보-보수)이 투표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표 11> 진보 - 보수 이념이 17대 대선 투표 참여에 미친 영향<sup>3)</sup>

	M1	M2	M3
진보 - 보수	1,102(.029)*		1,102(.03)*
진보 - 보수 square		1,003(0.792)	1,002(.859)

알아 본 것이 다음의 <표 11>이다.

<표 11>에서 M1은 11점 척도의 이념 요인을 독립변수로 놓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한 결과이다. 결과를 보면 보수적일수록 17대 대선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는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수 지표 1이 상승할 때마다 선거에 참여할 확률은 1.102배 상승하나 이 M1이 간과할 수 있는 위험은 보수주의자 혹은 진보주의자의 투표 참여를 중도주의적 성향의 응답자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고자 M2 모델을 사용하였다. M2는 진보-보수 스퀘어(square) 변수를 독립변수로 놓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한 결과이다.<sup>14)</sup>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진보나 보수적인 성향의 응답자들은 중도주의적 응답자에 비해 17대 대선에서 투표에 참여했을 확률이 높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이념 변수와 이념의 스퀘어 변수 모두를 사용한 M3에서도 확인되는데 이념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승산비도 M1과 차이가 없지만, 이념의 스퀘어 변수는 통계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중도주의자들에 비해서 진보나 보수로 갈수록 투표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진보에서 보수로 갈수록 투표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진보주의자들이 중도주의자들보다 투표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고,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많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세가지 모델의 종합적 해석이 될 것이다. 이는 이명박 후보 지지나 한나라당 지지의 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17대 대선에서는 보수적이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를 선호하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이 높았던 반면에 진보적이거나 범여권 후보 지지자,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은 투표 참여율이 높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노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4점 척도로 조사한 것을 독립변수로 두고

13) 진보-보수는 11점 척도로(0-10), 점수가 높을수록 보수, 점수가 낮을수록 진보이다. 진보-보수 square는 점수가 높을수록 진보거나 보수적인 극단에 가깝고, 점수가 낮을수록 중도에 가깝다. 이탤릭체는 신뢰구간 9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의미한다. 로지스틱 분석을 하였고, 표의 계수는  $\text{Exp}(\beta)$ 이다.

14) 중도를 0으로 진보를 -5까지, 보수를 +5까지의 10점 척도로 고쳐서, 그 변수의 스퀘어 변수를 만들었다.

투표 참여를 종속 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을 때,  $\text{Exp}(\beta)$ 는 1.706이 나왔고, 유의도는 0.000이 나왔다. 이는 노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1 증가할 때, 17대 대선에 투표 참여할 확률이 1.706배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 대통령에 부정적인 평가를 가진 유권자일수록 17대 대선에 참여하여 처벌투표를 하려는 동인이 컸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유권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노 대통령의 업무 평가에 부정적이거나 보수적인 유권자들은 그렇지 않은 유권자에 비해 17대 대선에 투표하는 경향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III. 결론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차점자인 정동영 후보에게 압도적 차이로 승리하였고, 그 차이는 최근 치러진 대선 중에서 가장 큰 득표율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단순히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지지자였던 유권자들이 이명박 후보에게 표를 던졌기 때문만은 아니고, 이들의 투표 참여 자체가 적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전통적인 범여권 지지기반이었던 호남의 지역주의가 투표율을 끌어올리지 못하였고,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유권자, 정동영 후보를 좋아하는 유권자 등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이명박 후보를 좋아하는 유권자,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보수적인 유권자 층이 투표에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한 것이 이명박 후보의 압승의 또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선거가 일찍이 승자를 쉽게 예측할 수 있을만큼 선거 경합성이 낮았던 점도 낮은 투표율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선거 경합성에서 중요한 것은 10% 이상의 표를 얻고, 차점자와 표를 합산하면 1위 득표자보다 표가 더 많이 나오는 제3후보의 존재이다. 이렇게 강력한 제3후보자가 존재했던 선거는 높은 선거 경합성으로 인해 투표율이 높았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투표율이 낮았었다.

후보자 지지 성향에 있어서 지역주의는 유효한 변수지만 17대 대선에서 투표 참여에 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였다고 볼 수 없다. 모든 조건이 같다면 호남의 유권자들이 타 지역, 특히 중립지역인 수도권, 강원, 제주의 유권자들보다 높은 참여를 보여주었던 것이 예전의 대선이었다면, 이번 17대 대선의 투표 참여율에서만큼은 지역주의 성향을 뒷받침할만한 통계적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연령, 특히 20대의 낮은 투표 성향은 한국 대선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번 17대 대선에서도 다른 조건이 같다면 타 연령층에 비해 낮은 투표 참여율을 보여주었다. 16대 피크를 이루었던 20대의 대선 참여율이 17대에 다시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된 것을 해석할 때, 16대를 예외적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젊은 층의 투표 참여가 선거 때마다 크게 변화하는 것인지 판단을 내리기에는 다소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다.

16대 대선에서는 범여권의 전신인 민주당 지지성향과 한나라당 지지성향은 투표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지만, 17대 대선에서는 한나라당 지지성향만이 투표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지지후보의 패퇴가 예상되는데다가,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실망, 그리고 정동영 후보의 상대적 약세 등으로 인해, 범여권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나라당 지지 성향의 경우에는 17대 대선에서도 여전히 투표 참여율에 통계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열린 우리당과 민노당 지지는 직접적으로 투표 참여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선거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거 관심도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선거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범여권 혹은 진보주의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았고, 낮은 선거에 대한 관심은 낮은 투표율로 이어지게 되었다.

후보자적 요인과 이념 요인,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 등도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번 17대 대선에서는 이명박 후보를 지지할수록, 보수적일수록, 노무현 정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투표 참여의 확률이 증가하고, 권영길 후보에 대해 반대할수록 투표 참여 확률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17대 대선의 투표 참여에는 후보자 요인, 정당 요인,



연령 요인, 이념 요인, 노무현 정부 평가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이 모든 것은 이명박 후보의 압승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 욱. 1999. “거주지 규모와 연령이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 조중빈 편. 『한국의 선거 III』. 푸른길.
- \_\_\_\_\_. 2002. “한국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대한 통합적 연구방향의 모색: 일반이론의 효용성에 대한 방법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진영재 편. 『한국의 선거 IV』.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 \_\_\_\_\_. 2005. 『정치 참여와 탈몰질주의: 한국과 스웨덴의 비교』. 파주: 집문당.
- 황아란 1997. “선거구 특성이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제 15대 국회의원 선거분석.” 『한국정치학회보』 Vol. 30, No. 4.
- Patterson, Thomas E. 2002. *The Vanishing Voter*. New York: Vintage Books.
- Riker, W., and P. Ordeshook. 1968. “A Theory of Calculus of Voting.” *APSR* 62: pp. 25 - 42.
- Wattenberg, Martin P. 1992. *The Decline of American Political Parties 1952-1992*.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2. *Where Have All the Voters Gon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ABSTRACT]

## Voting Turnout and Abstention in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Kim, Jin-ha | Keimyung University

The voting turnout in the 2007 presidential election is the lowest after the democratization in 1987. I analyze the voting turnout of 2007 in the perspective of election competition, candidate impacts, party identification, and other demographical variables.

Age was important in the voting turnout of the 2007 presidential election as it has been in past elections. Whereas Honam's regionalism has been critical in the voting turnout in past elections, it lost a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2007 election. Party identification was important among voters leaning toward Hanara and Minju. On the contrary, party identification for other parties were not significant in the voting turnout. The more conservative the electorates, the more likely to go to the poll in the 2007 presidential election. Affection rate for Lee MB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possibility of voting.

Owing to the low competition, electorates were less likely to vote. The existence of the powerful third candidate in the election could be a decisive factor in the voting turnout rate. In the 2007 election, Lee HC was not enough to raise voting turnout because he was not powerful third candidate. In a definition, the powerful candidate is one who received more than 10% of total votes, then could upset the election result if his/her votes add to runner-up's votes.

---

**Key Words** | Voting turnout, Abstention, Elective Competition, Presidential Election, Regionalism, Generation, Ideology, Korean Election